



더 다 닦았는데... 나주 금천·산포면 일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상 17개 공공기관이 이주작업을 의도적으로 미룰 조짐이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혁신도시시는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

옛 도청별관 점거농성 해제 시민단체 “문화전당 조기건립 힘모을 것”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놓고 갈등했던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조기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5·18 사적지 임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시도민 대책위)'의 별관 점거농성 철수를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한마당 잔치'를 갖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또 별관 철거논란에서 대립했던 5·18 구속부상자회와 민주유공자 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도 통합 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성을 끝 시·도민 대책위를 주축으로 별관 철거 논란에 관여해 왔던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만간 옛 전남도청 앞에서 '화합의 한 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시도민 대책위는 행사 업체와 구체적인 행사 날짜와 진행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다.

시도민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주의 정체성과 발전전략 및 비

전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등 시민사회와 5월 단체, 관계기관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내년 광주항쟁 30주기를 앞두고 별관 논란으로 통합논의를 중단했던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박 시장을 만나 통합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별관 철거 논란으로 1년 여 문화전당 건립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이제는 전당의 조기건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 사회단체 등이 주된 의식을 갖고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與 세종시 축소 추진에 나주 혁신도시 불똥 공기업들 이전 눈치보기 급급

부지매입 미루고 사업 지연 조짐 등 차질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 핵심부가 세종시 건설 사업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더욱이 광주·전남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도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이전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조짐이어서 지역주민과 야권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성격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경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학과 대기업,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자문기구'를 설치, 국민여론 파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새로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때를 맞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기로 한 한국전력공사는 신청사 부지 매입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6월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분사 이전이 불가함을 공식화했다.

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승인받은 농업연수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주), 한전(KDN) 등도 청사설계 공도나 부지매입을 애초 계획보다 지연시키고 있어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따른 의도적 행보라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이미 관련 계획을 세워놓고도 세종시 건설 법 개정을 우려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전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와 공기업 전체가 한 덩어리 움직이는 문제여서 전환만 때여놓고 생각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눈치보기로 전이되면서 이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은 여야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마저 축소되면서 이전기관의 의지는 더욱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킬앤하이드 김장훈·사이완타치

2009년 10월 24일~25일 · 광주문화재단 후원

2009년 12월 25일 · 광주점주대우 후원

무안반도도 '파행 공청회'

무안·신안 불참...행안부, 공무원 동원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키로

광양만권에 이어 14일 무안에서 열린 무안반도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도 해당 지자체 3곳 중 2곳이 불참해 또 다시 '파행' 공청회가 이뤄졌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 자율통합 신청을 한 지역 2곳이 모두 사실상 알맹이 없는 공청회로 막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무안군 소재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 홀에서 목포시, 무안·신안군 등 3곳 지자체 주민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통합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과 신안군 등 2곳의 대표 지정 토론자인 김석원 전남도의회 의원(무안), 정해진 무안사랑 포럼 대표, 주장배 신안군의회 의장, 고관술 천사심 신안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주민들이 불참했다.

반면, 자율통합에 적극적인 목포시의 경우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사회로, 정부 측에서 나온 김성중 행안부 행정구역팀장과 통합 찬성 측 토론자인 양승주 목포대 교수, 신대운 무안반도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만이 참석해 반대 토론 없는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양승주 교수는 "무안반도 통합은 15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그동안은 관 중심이었지만, 이번엔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율통합에 나선 것은 지역의 경쟁력이 약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등을 동원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자치단체장을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무안에서는 공무원들이 3만~5만 원씩 모아 통합 반대단체의 활동비로 지급했고, 신안군에선 일부 지역 면장들이 통합찬성과 관련한 주민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중용했다는 내용이 신고되는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관련개입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만간 총동맹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총동맹회 체육대회

일시: 2009. 10. 18(월) 09:30

장소: 모교운동장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88888 알 재 군

